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 갈등 잠재우고 한반도 위기 해결 토대 구축

文대통령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

지난 13일부터 3박 4일 동안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한반도 안보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G2(주요 2개국), 즉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정상 차원의 방문 외교를 통해 '협력적 토대'를 구축했다. 지난 6월 말 미국 공식 방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의 토대를 쌓은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 정상이 지난 14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5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다진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역지사지'(易地思之·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한다)와 '관왕지래'(觀往知來·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를 양대키워드로 삼아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에 시 주석은 "앞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역지사지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

했다는 후문이다. 또 '관왕지래'를 키워드로 한·중 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 함께 싸웠던 '역사적 동질성'을 강조, 중국의 공감을 끌어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이 사실상 '사 드보복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는 점도 성과다. 양국 정상이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양국 관계 복원 은 물론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 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는 이번 방중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홀대론'을 일축하고 있다. 특히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이 중국에 '저자세'를 보였고 두 차례에 불과했던 식사 일정등에 대해 우리의 안보적 이익과 중국의 이해를 충분히 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빈 방문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의전 등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만큼 중국의 대북원유공급 중단 등 구체적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방중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얻어 낸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계속 노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당 지방선거 지자체장 후보경선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조사 50%를 각각 반영해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고위 전략회의에서 이런 공감대를 이뤘다고 당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고위전략회의는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정무직 당직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로 매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최 근 고위 전략회의에서 자자체장 후보 경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사무총장이 단장인 지 방선거기획단 차원에서 관련 방침을 정리한 뒤 중 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50% 및 권리당원 조사 50%' 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당규에 있 는 국민참여경선의 방법과 반영 비율,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당규에서 국민참여경선은 선거인단투 표나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인터넷투 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권리당원은 50% 이하, 일반 유권자는 50% 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여론조사의 경우 안심번호를 활용 키로 했다. 안심번호는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다는 특징이 있다. 민주당은 또 권리당원 50%는 해 당 선거지역에 거주하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경선 규칙을 조기에 구체화하는 것은 문 대통령과 당의 높은 지지율로,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야당과 달리 출마 희망자가 몰리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에 임박해 규칙을 정할 경우 후보간 유불리를 놓고 혹시나 불거질지 모를 파열음을 최소화하려고 서둘러 큰 틀의 원칙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당 분당 이번주 분수령 이르면 23·26일 중 통합선언

安대표 내일 의견수렴 마무리 유승민 대표와 회동·결단만 남아 통합 찬성 원외 위원장 연대회의

통합 반대파 '평화개혁연대' 세몰이 가속화 하며 일전 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내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중도 통합론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절차를 일단락 짓는 이번 주가 당의 진로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통합파와 반대파가 결정적 합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연내 분당이 불가피 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18일 강원, 19일 대전·충청 지역 방문을 끝으로 전국 당원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무 리한다. 이로써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 당 내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 각 지역 당원들까지 여론 청취가 끝난 만큼, 남은 것은 통합 선언 뿐이 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1일 호남에서 열릴 예정인 국민통합포럼 행사에 안 대표와 유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다시 한 번 통합 의지를 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두 사람 모두 부인했지만 12월 임시 국회가 끝나는 오는 23일이나 성탄절 이후인 26일 공식 통합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통합 찬성파인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중도개혁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한 것을 두고서도 통합선언 후 열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대오를 정비하려는 안 대표 측의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통합 반대파인 호남 중진들도 '평화 개혁연대' 활동을 통한 세몰이를 가속화하면서 안 대표와의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평화개혁연대는 19일 전북 전주에서 토론회를 열고, 통합에 반대하 는 초선들 모임인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의원)' 와 공동전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먼저 당을 깨고 나갈 수는 없다며 마지막 까지 통합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지만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공식화하고 전당대회 일정을 구체화하면 결국 탈당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내 세력 분포 상 당무위나 중

앙위 표결, 전당원투표제, 전당대회 등 어떠한 절 차를 거친다 해도 통합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서 시간을 끌지 않고 속전속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문제는 교섭단체(20명) 구성이다.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선언하면 일단 최소 두 자리 수이상의 의원들이 연내 탈당하고 이어 연초에 2차탈당 등을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탈당 규모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에는 못 미치는 15~16명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이고민이다.

비례대표 의원들도 5명 정도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지만 탈당을 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정서상 호남 지역 국회의원만 20명 정도가 최종적으로 탈당에 나설 수 있는데다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가세할 수 있어 교섭단체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분열은 공멸이라는 점에서 손 전대표가 나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완충점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오는 21일 귀국할예정이며 최근 정치권 인사들과 향후 역할에 대한의견을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